

“교수 되려면 1억 내라고 했다”

40대 시간강사 이대통령에 유서 남기고 자살

40대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를 하려면 수억 원을 내야 한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25일 밤 11시에 광주 모 사립대 시간강사 서모(45)씨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 연탄을 피워놓고 숨져있는 것을 부인(4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최근 이 대학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서씨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라고 쓴 유서에서 “교수 한 마리(한 자리)가 1억 5천, 3억이라는 군요, 저는 두 번 제의를 받았습니디.”라고 적고, 교수 채용 대가로 대략 2년 전 전남의 한

사립대학에서 6000만 원, 두 달 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서 1억을 요구 받았다고 적었다.

지난 10년간 광주·전남 3개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해온 서씨는 “(현행) 시간강사(제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한국사회를 그대로 두면 썩는다.”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모임인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수 임용에 있어서 일부 사립대학이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바닥에서 교수가 되려면 2억 원을 기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의 유서에서 거론된 경기도의 사립대학은 “그런 사실이 없

다”고 부인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두 달 전 교수채용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서 전공은 채용대상이 아니었으며, 돈을 요구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교수들의 논문 작성·발표 과정에서도 비리가 많다고 적었다. 서씨는 자신이 석·박사학위를 받고 시간강사로 근무한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를 지칭하면서 “교수님 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흥재단 발표논문 4편을 썼다.”며 논문 대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고발했다.

서씨는 또 자택문 교수와 관련 “같이 쓴 논문 대략 54편 모두 제가 쓴 논

문으로 이 교수는 이름만 들어갔으며 세상에 알려 법정투쟁을 부탁드린다.”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해당 교수는 “서씨가 상심일이 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이 논문을 쓰면 교수가 이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서씨의 가족들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숨진 서씨의 가족들은 “대학들이 채용 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으며, 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선택 6·2 지방선거 D-6



6·2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하러 앞둔 26일 오후 선관위 직원들이 광주시 서구청 구민생활관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27~28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장환-장만채 양강 압축

전남도교육감 선거, 교육관료 출신 후보 단일화

6·2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전남교육청 출신 교육 전문 관료’와 ‘대학총장 출신’의 2강 대결로 압축됐다. <관련기사 3면>

김장환 후보측은 26일 오후 8시 광주 동아태자관보,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시내모처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려 몇 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검토되는 금융제재 방안이 과거 방콕태아시아(BDA) 사태와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결정 이후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퇴거 조치됐다.

이 선박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기존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해하다가 우리측의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경고통신을 받고 항로대를 벗어나 후회했다. /연협뉴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사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자신과 신태학 후보와의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 장만채 후보를 크게 앞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풍부한 교육 경력과 전문적 식견, 보통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에 선출돼야 한다는 도민과 교육 가족 바람에 따라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면서 “신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단일화에 동의한 서기남·윤기선 전 후보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대학생을 가르쳤던 대학교수에 맡길 수 없다”며 단일화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신 후보는 전남도 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한 서기남·윤기선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애초 7명이었던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재선 교육감인 김장환 후보와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만채 후보, 동아인재대 총장 김경택 후보, 여수정보고교 전 교장인 광영표 후보 등 4명으로 줄었다. /최권일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가 27일과 28일 양일간 광주·전남지역 34개 일반 부재자 투표소와 병원·요양소 등에 설치하는 19개 기관·시설 내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선관위는 광주·전남지역 부재자 투표 대상자 8만4772명(광주 2만7838명·전남 5만6934명)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 부재자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하면 되고, 신분증과 함께 선관위에서 받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우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 더 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반도 일촉즉발

南, 해상항로 폐쇄 서해 北 상선 퇴거 北, 통신선 차단·개성공단 인력 추방

클린턴 “北 지도자 책임 물을 것”...미·일 고강도 금융제재 착수

전안함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졌다.

북측은 26일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북 관계자를 추방했다. 우리측도 서해상에서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했다. 방한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 지도부로 흘러가는 돈을 끊을 태세다. <관련기사 3면>

◇북측 8개 행동조치 시작=북측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우리 측 관계자 8명을 추방했다. 이수영 소장을 비롯한 이들 통일부 관계자 8명은 오후 1시45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북측은 앞서 오전 10시에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

소의 사업중단과 통신연계를 차단한다고 알려졌다. 또 해사 당국 간 통신망에 대해서도 우리 해군 당국 앞으로 통신연계 차단을 통보해왔다. 북측은 또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개성공단 통행 차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측은 전날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전안함 사태와 관련, “응답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시내모처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려 몇 주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검토되는 금융제재 방안이 과거 방콕태아시아(BDA) 사태와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결정 이후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퇴거 조치됐다.

이 선박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기존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해하다가 우리측의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경고통신을 받고 항로대를 벗어나 후회했다. /연협뉴스

민주당

강운태가 희망입니다!

5월 18일 투표의 해군, 육군, 경찰, 민주시민운동 시의원, 의정후추추보, 5월 18일 국가기념일 지원 등 5월 18일의 미래를 회복 시키기 위한 그 끈질긴 집념으로,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창설해 문화수도 광주에 기초를 두었던 그 향토의 정신으로, 일조한 무수한 헌신과 헌신으로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을 유지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끈질긴 집념, 창조적 정신, 뜨거운 열정 그대로 다시, 광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인

2 강운태